

# 주간 이슈 리포트

74 호

2005년 3월 넷째주(3/21 ~ 26)

## ◎ 주요내용

- |            |                            |
|------------|----------------------------|
| - 세상돋보기:   | 교사가 풀빵 기계인가?               |
| - 노동자 세상:  | 경기회복 된다고 사회양극화 해결되나?       |
| - 통신정책:    | 정통부 통신정책 '변화의 기류'          |
| - 정자동 6층에서 | 최장집 교수 "노무현 정부 노동-복지정책 없어" |
| - 만화방      | 시사만화                       |



## 교사가 풀빵 기계인가?

사회가 독도문제로 들끓고 있는 동안 교육현장에서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이 강행하고 있는 중1진단평가와 서술·논술형 평가 30% 반영 등 ‘학력신장방안’을 놓고 학기 초부터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미 발표한 대로 초·중등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진단평가는 물론 서술·논술형 문제의 비율을 좀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교사들은 “이미 자율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학교현장의 평가방법에 교육청이 끼어들면서 되레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다.

아무리 좋은 안도 실행하는 주체와 방법의 문제점을 보지 않는다면 부작용이 크다고 생각한다. 교육일선현장의 교사들의 의견에 귀기울여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박혜성 전교조 서울지부 교육선전국장(경복고 교사)의 기고문을 옮겨적는다.

### 새 학기, 교사들은 ‘공문 용단폭격’에 시름하고 있다

3월은 교사들에게 긴장의 연속이다. 새 아이들을 만나고, 새로 맡은 업무의 계획을 짜야 하고, 1년 동안의 평가계획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조사하고 걸어야 할 일거리들은 좀 많은가. 가정환경조사서, 주소록 작성, 사진, 주민등록표 걸기, 학부모총회 안내... 수업은 오히려 일하다가 가서 한 숨 돌리는 시간이 된다. 몸살을 한바탕 앓고 나서 4월이 되면 비로소 아이들의 이름을 익히고 수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올해는 예년보다 더 힘겨운 3월이다.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학생 학력신장 방안’을 추진하면서 학교 현장을 뒤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개학하자마자 공문이 수도 없이 내려왔다. “중1 진단평가를 실시하라” “서술·논술형 평가를 30% 이상 넣어서 평가 계획을 수립하라”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해 실시하라” 등등.

중1진단평가 실시를 두고 이미 학교 현장은 진통을 겪었다. 지난해에는 문제만 개발해서 ‘알아서 사용하라’고 내려 주던 것을 올해는 반드시 인근학교와 날짜를 맞춰서 일제히 실시하라고 못을 박은 게 화근이었다. “학교 간 성적비교는 하지 않겠다” “부진아 지도 대책 수립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왜 동시에 실시해야 하는 지 교사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담임협의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시험 보는 날짜를 정하고 활용방법을 강구했던 학교들은 교육청과 교장으로부터 갖은 협박과 회유에 시달려야 했다. 그리고 16일 교육청은

100% 달성을 자랑하며 결과를 발표했다.

학부모들은 궁금해 할 것이다. “진단평가 본다는데 교사들이 왜 반대하지? 일하기 싫어서 그런가”. 교사들은 진단평가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 일하기 싫은 것은 더더욱 아니다. 교육청에서 문제 다 만들어, 문제지까지 인쇄해줘 시험만 보면 되는데도 날짜 맞춰 보는 것에 반대한 것은 이미 지방에서 일어난 부작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험결과를 놓고 ○○초등학교 출신들이 1~3등 석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6학년 담임들에게 “진단평가 신경쓰세요”라며 압박하고, 그러면 6학년 2학기 교육과정은 실종되고, 학원들은 겨울방학 때 중1진단평가 대비반을 편성할 것이 뻔하다. 이게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교육청의 방안인가?

### 교사 의견 묻지도 않고 ‘지시’에 목매는 학교현장

두 번째 ‘과도’는 서술·논술형 평가 강제로 밀려왔다. 사고력, 문제해결력 및 창의력 등 고등정신능력 배양을 위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서 총 배점의 30%이상을 서술·논술형 평가로 실시하고, 나머지 70%에서 수행평가와 지필평가의 비율은 학교 자율로 결정하라고 했다. 공문이 내려온 즉시 교장들은 관련교과 교사들에게 평가 계획을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한 국어 교사는 말했다. “국어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고, 도서실을 이용한 학습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오고 있는데, 느닷없이 논술만 30% 이상 넣으라고 하면 다른 활동들은 위축되어서 안돼요. 배점이 과합니다.”

영어 교사도 말했다. “영어에서 논술형을 내라니, 영작을 내란 말입니까? 해석하기를 내란 말입니까? 영작이나 독해는 사고력이나 문제해결력이나 창의력과 별로 관련도 없는데... 그럼 영어지문 주고, 한글로 의견 쓰는 문제를 낼까요? 그건 국어하고 뭐가 다르죠?”

사회 교사도 반발했다. “이번 1학년에서 우리 마을 지도 만들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건 논술형이 아니라니, 별도로 논술까지 내려면 채점 부담이 너무 커요. 사실은 지도 만들기가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훨씬 더 키우는 것인데, 논술형 하나에 목을 매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수학·과학 교사들도 할 말이 많다고 한다.

무엇보다 교사들이 화가 난 것은 교육청의 지시가 교사들의 전문성을 믿지 않고, 평가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이미 선택형 지필평가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의 극복을 위해 서술·논술형 뿐만 아니라 다양한 평가 방법을 개발해 실시해왔으며, 또 교과협의회를 통해 반영비율과 세부기준까지 다 세우고 있는데 교육청이 지평을 열어주기는커녕 제한하려 드니 반발을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시교육청, 과연 학교 현실 알고나 있는지 의문

공정택 시교육감은 ‘학력신장 방안’을 발표하면서 “학력신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그거 ‘선생’ 아니라고 본다”고 엄포를 놓았다. 학력신장에 반대하는 교사는 아무도 없다. 교육감의 엄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력을 키우고자 하는 것은 교사들의 기본적인 임무이고 고민이기 때문이다. 공부는 교육청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시키는 것이다. 교육청은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간절히 바란다.

교육청은 ‘부진아 제로운동’을 추진한다면서 초등학교에 부진아 지도비가 아예 편성도 안된 학교가 있는 것을 정녕 알고 있는가. 또, 초등선생님들이 학년모임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창조적으로 작성한 교육과정이 학력평가 실시 계획에 의해 몽땅 부정되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는가.

개개의 교사들이 못 미더우면 교사협의회, 성적관리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자치기구의 역할과 권한을 더 강화하라. 교육청은 학교장들이 의견수렴절차를 제대로 지키는지를 감시하라. 3월의 출발이 힘들긴 해도 새로운 각오로 아이들을 만나는 교사들이 또다시 비맞으며 교육청 앞에 항의하러 가는 일은 없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 경기회복된다고 사회양극화 해결되나?

신년들어 경기가 회복된다는 언론보도가 많다. 특히 부유층의 씀씀이가 늘어나고 있다며 중산층까지 소비확대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이 곱지만은 않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이익이 늘어나고 있지만 분배에는 인색하다. 그렇다보니 소비는 여전히 증가하지 않고 소비가 없다면 기업들의 생산활동을 위축되게 된다. 성장과 분배를 나누어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원보 이사장의 글을 통해 경기회복과 사회양극화 문제에 대해 알아본다.

이런 저런 기회로 노조 간부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올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가 무엇인가에 이르면 다음 몇 가지로 집약된다. 경기침체, 비정규직 노동자, 남북화해, 사회양극화, 구조조정, 고용안정, 임금인상 등이 그것이다. 대부분 우울한 내용들이지만 어디에서나 대체로 일치하는 것을 보면 최근 우리 사회를 특징지우는 징표들임에는 틀림없는 듯 하다. 내용으로 보면 남북화해문제를 제외하고 노동문제이자 격차와 관련돼 있다. 노동현장의 문제의식은 정부의 진단과 거의 맞아 떨어진다. 노무현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지방, 상하위 계층간의 심화된 격차 해소를 외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들었다. 그리고 그 해법으로 '동반성장'을 제시했다. 성장이나, 분배나 하는 이분법의 낡은 개념을 넘어서서 성장과 분배 사이의 선순환을 이룩하겠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의 진단과 해법은 국회 국정연설에서 '선진한국' 건설의 비전과 전략에서 보다 광범하고 자세하게 설명됐다. 대통령은 선진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정부를 비롯해 정치, 경제, 언론의 주체들에게 자기 혁신과 책임을 주문했다. 시민사회에게는 저항적 참여보다는 대안을 내놓는 창조적 참여에 중점을 두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를 선진한국의 지표로 삼자고 강조했다.

### 확대일로의 사회양극화

'양극화'라는 개념은 확실하게 정리돼 있지는 않지만 그 출발점은 사회, 부문, 개인 사이의 '격차'이고 그것이 지나치게 커져서 양극단으로 몰려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한 듯

하다.

우리나라에 각종 격차 확대의 심각성이 지적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성장신화에 묻혀 무시돼 왔었다. 그러던 것이 극소수에 의한 독점과 대다수의 소외와 빈곤이 성장과 발전 자체를 위협하는데 이르렀다고 인식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그 원인은 대체로 경제의 세계화와 정책의 실패라고 지적된다.

실제 양극화는 심각하기 그지 없다. 특히 소득과 재산의 편중이 경제침체와 사회발전의 퇴락에 미치는 충격은 너무나 크고 마침내는 정치적 불안과 사회해체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공통된 결론이다. 최근에만도 통계청이 분석한 2004년도 가구소득을 보면 상위 20%가 하위 20%의 7.35배로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전국가구의 28.8%는 적자이고 하위 30%중에는 52.7%가 적자가구였다. 종합토지세 납부 상위 10%가 전국의 토지 72%를 차지하고 있고 절대빈곤의 확대로 인한 사회문제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양극화 대책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장지상주의로 기울어 있다. 곧 세계화 추세는 거역할 수 없는 대세이고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개방화, 시장기능의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론자들은 경기가 풀리고 기업경영이 활기를 띠면 양극화는 저절로 해결된다고 보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든가 경제개혁, 재벌개혁을 유예하거나 유보해야 한다는 이른바 실용주의의 뿌리는 거기에 있다.

그에 비해 양극화의 근원을 해결하고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대통령은 동반성장을 역설하고 있지만 정책의 각론에서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사회안전망의 확대 강화와 같은 얘기는 옛날 것처럼 들리고 '경제올인'이 지상명제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 성장지상주의로 기운 정부 양극화 대책

사회양극화의 근저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방만한 남용과 극심한 차별이 가로놓여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한 것은 노동자가 원해서 된 것은 아니다. 그 원인의 핵심은 기업의 유연화 합리화 전략에서 비롯된다. 특히 경제위기 극복의 한 방편으로 정리하고 중심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비정규직으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한데서 비롯됐다.

인적자본의 소중함보다 비용과 단기 수익에 민감한 우리나라 자본가들이 손쉽게 선택한 수단이었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했다. 참여정부도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한다고 천명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유연성을 강조했다. 장기간의 경제침체의 위협이 작용했지만 노동과의 대립은 필연이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의 중요한 증가원인으로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이 지키고 있는 고용의 경직성을 자주 제기했다. 그리고 정규직 노조의 양보가 중요한 해법의 하나로 강조됐고 특히 대기업 노조는 도덕적인 지탄의 대상으로 되기도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연설에서 '정규직에 대한 강한 보호'나 연대임금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제안없이 노동자간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겠느냐고 강하게 물었다. 총리도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고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것은 모든 계층, 지역, 기업을 위한 것”이라며 상위계층, 대기업, 수도권 등 좀더 앞서 가는 쪽이 양보해야 한다”면서 특히 노동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와 기업의 양보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노조와 정규직들도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분석은 노동쪽이나 연구자들을 쉽게 납득시키지 못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소장은 실증분석을 통해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이 아니라 기업 또는 시장의 횡포를 제어할 노동시장 경직성의 결여 때문이며, 노동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진 사실에 비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몫을 떼어간 것은 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주라고 분석하고 있다.

### **양극화 종합대책,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야**

대통령이 말하면 모든 것이 진리로 통하는 관료사회의 관성을 모르지 않지만 도대체 비정규직 노동 문제에 대한 원인분석과 근본해법을 제시함이 없이 노동운동의 연대나 대의만을 빗대어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동반성장을 위한 참된 길은 아닌 듯 하다.

종합주가지수가 1000을 넘어서고 경기가 풀린다는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된다고 한다. 오래 경기가 가라앉다 보니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만 경기회복만 되면 양극화도 저절로 풀릴 것이라는 시장주의의 기본시각에서는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나 양극화는 경기회복이나 경제성장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촉진될 위험성마저 있다. 더욱이 경기는 항상 변화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모처럼 제기된 양극화 해소과제가 경제성장이나 경기활성화의 거품 속에 묻히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양극화를 치유할 수 있는 종합 근본정책이 경기변화와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것이 절차상의 민주주의와 함께 실질 민주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역사적 요구에 참여정부가 가까이 다가가는 길일 것이다.

이원보 본지 논설위원 leewb@klsi.org



## 정통부 통신정책 ‘변화의 기류’

정부가 통신시장에 대해 일관되게 견지해온 ‘비대칭 규제를 통한 유효경쟁 활성화’라는 정책 기조에 변화의 기류가 번지고 있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네티즌과 가진 한 간담회에서 초고속인터넷 종량제 도입 검토, 일방적인 요금 인하 불가 방침과 함께 올해 비대칭 규제를 축소하겠다고 언급하면서부터다.

비대칭 규제를 적극 펼쳤던 지난해 정책 기조와는 사뭇 다른 발언이다. 정통부는 지난해 장기증분원가방식(LRIC) 도입과 선후발 업체 간 접속료 및 주파수 사용료 차등화를 비롯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결합 서비스 조건부 허가 △가입자선로(LLU) 제도 재정비 등 비대칭 규제 성격이 짙은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었다.

정통부는 ‘확대 해석’에 대해 손사래를 쳤지만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이 왜 나왔는지 그 배경에 사업자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정통부의 비대칭 규제와 관련한 변화의 기류들을 전자신문 기사 발췌를 통해 엿보도록 하자.

◇규제완화, 투자유도로 전환(?)=참여 정부의 올해 정책목표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이 점에서 보면 진 장관의 발언은 투자여력이 있는 선발주자들을 복돋워 경기회복의 견인차로 삼겠다는 의중이 짙다. 업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당근(?)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미로 분석한다.

지난해에는 선·후발 사업자들의 수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접속료를 조정하는 등 비대칭 규제를 폈지만 올해는 명분이 없는만큼 굳이 나서서 자극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초고속인터넷 망고도화에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가는 데다 소비자 차별까지 이뤄지는 현 정책 제 구조가 불합리하다며 통신사업자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정통부 관계자는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은 근본적인 정책기조였지 갑자기 변한 것은 아니다”면서 “접속료 산정은 2년마다 하는 것이어서 올해 해당사항이 없어 그런 언급이 나왔으며 초고속인터넷 요금제 개편은 정부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들 희비 엇갈려=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선·후발 업체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선발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LG통신그룹, 하나로텔레콤, KTF 등 후발사업자들은 애써 의미를 축소하려는 눈치다.

이용경 KT 사장은 지난 11일 주총에서 “총량제에 대해 이미 정부와 공감대를 이뤘다”며 “네티즌을 설득하는 상황”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사장은 또 “매출대비 20%를 투자하는 통신기업은 단연 KT뿐”이라면서 “KT의 미래가치 향상을 위해 정책협력 등에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시장점유율에 스스로 상한선(52.3%)을 둔 업체는 SK텔레콤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자율적으로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발 사업자들은 총량제 도입 검토, 신중한 요금 인하 등의 발언을 환영하면서도 비대칭 규제 축소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며 진의 파악 등 촉각을 곤두세웠다.

KTF와 LG텔레콤 관계자들은 “원론적인 언급이지 유효경쟁을 중단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느냐”면서도 “800MHz 주파수 독점에 따른 구조적인 경쟁제한 요소가 남아 있어 추가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나로텔레콤과 데이콤 측은 “유선시장에서의 KT 지배력은 이동시장의 SK텔레콤에 비해 더 강하다”면서 “정부는 비대칭 규제가 아니라 독점을 막고 후발업체들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입장에서 계속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발사업자들은 이처럼 자신의 요구사항을 비대칭 규제 축소와 별개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불안감을 감추지는 못했다.



## 최장집 교수 “노무현정부 노동-복지정책 없어”

한국 민주주의 연구의 권위자인 최장집 교수(고려대 정치외교학)가 집권 3년차를 맞은 노무현 정부에 대해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

최 교수는 조만간 발표될 논문('사회적 시민권 없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에서 "노무현 정부의 경우는 노동-복지정책이라고 부를만한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언급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며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노무현 정부의 업적은 너무나 빈곤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른바 '민주정부들' 중 가장 개혁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던 노무현 정부가 실질적 민주주의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사회적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실패했다는 지적에 다름 아니다.

최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경제정책의 틀을 발전시킨 것도 아니었고 '2만불 성장시대'라는 정책목표의 선택과 아울러 집권엘리트-경제관료-삼성그룹 간의 결합이 만들어지면서 개혁적 정책의 공간은 크게 축소되었다"며 "그것은 정서적 급진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스타일과 실제 내용에서 보수적인 경제정책의 기묘한 결합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최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를 표방한 것과 관련해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참여의 의미는 마치 정부가 아무개 계층, 아무개 집단에 혜택을 주는 정책을 만들려 하니 아이디어를 제출하라고 하는 식"이라며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정책산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참여'라는 이름의 관료기술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 "민주정부의 성장정책이 다시금 국가-재벌 동맹을 불러들여"

최 교수는 이 논문에서 '사회적 시민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YS·DJ·노무현 정부 등 '민주정부들'의 사회경제정책을 치밀하게 분석하면서 이들의 직무유기를 지적했다. 즉 "한국의 민주 정부는 지난날 권위주의하에서의 생산체제와 발전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기반과 잠재적 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하고 있다"는 것.

이어 최 교수는 "민주정부들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고 부르는 극단적인 시장 중심적 발전방향으로만 가속화되었다"면서 "집권 초기에는 노동포섭적, 사회복지적 정책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면서 개혁적 요소를 포함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성장과 효율성을 강

조하고 이를 통해 보수적 요소의 강화로 전환하는 퇴행의 궤적을 그렸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 교수는 "이러한 정책전환은 경제관료 및 기술관료들의 영향력 증대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민주정부와 경제관료의 결합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있던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를 재신임한 것이나, 결국 이 전 부총리가 사임했을 때도 "해일에 휩쓸려가는 장수를 붙잡으려고 허우적거리다가 놓쳐버린 것 같은 심정"이라고 각별한 애정을 표시한 데서 잘 드러난다. 이어 최 교수는 "한국의 민주정부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적 시민권의 부여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국가적 성격을 갖지 않으며 실질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킴에 있어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민주정부들이 박정희 정부 시기 권위주의적 복지모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힘의 균형은 일방적으로 권위주의로부터 성장한 보수적 부르주아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며 "민주정부의 성장정책이 다시금 국가-재벌 동맹을 불러들임으로써 그 힘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은 커다란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특히 최 교수는 "흥미로운 것은 미국적 시장중심 모델이 전일적으로 수용된 것은 민주화 이후 민주정부하에서라는 사실"이라며 "한국의 민주정부들이 신자유주의의 독트린을 가장 능동적으로 가장 과격하게 수용했다는 사실은 한국 민주화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 **"노동운동의 급진성과 전투성은 중산층과의 연대에 도움 안돼"**

또한 최 교수는 한국노동운동의 위기와 관련해 "노동의 위기는 민주정부들의 문제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고 전제한 뒤 "'운동에 의한 민주화' 과정은 민주화운동세력들이 권위주의정부를 해체하는 데는 강력했으나 민주정부를 유능하게 운영하는 문제에서는 별반 기여를 못했다"며 "노동운동 역시 정치적 억압과 투쟁했을 때는 강력했으나 민주화 이후 조건에서는 의외로 분열상과 무력함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오늘날 한국의 노동운동은 현실에 적용 가능한 이념과 원리를 갖지 못하며, 따라서 그로부터 도출되고 현실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을 발전시키지 못해왔다"며 "급진성과 전투성은 반대를 위해서는 필요한 무기이고 전략이지만 무엇인가를 스스로 성취하는 데는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교수는 "노동운동과 중산층과의 관계는 노동운동이 사회적 시민권을 획득하는 데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중심적 변수"라며 "급진적 레토릭은 새로운 환경 하에서 일반노동자들의 통합을 이끌어내는 데서도, 그리고 중산층과 광범한 연대를 만드는 데

서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충고했다.

특히 최 교수는 1977년 스페인 민주화 시기의 '몽클로아협약'을 예로 들며 "서민-소의계층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이들을 '적극적 시민'으로 만들 수 있는 실질적 민주화를 진전시키는" 사회적 협약을 맺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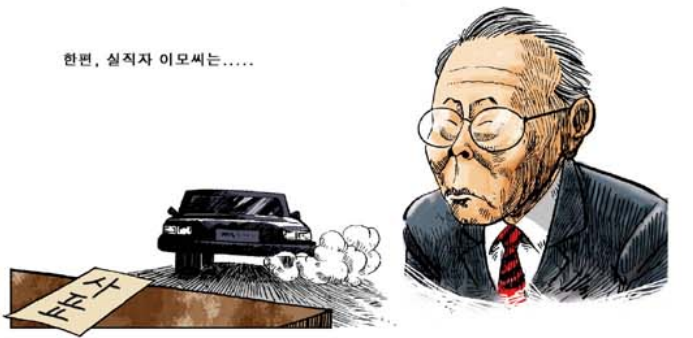
최 교수는 사회적 협약의 핵심의제로 "재벌기업의 오너십 보호와 노동자의 사회적 시민권 획득"을 거론한 뒤 "대타협을 통한 사회적 협약은 권위주의적-가부장적 부르주아 헤게모니의 구조를 민주적인 부르주아 우위와 시민주의적 헤게모니 양자 사이의 어느 지점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성론>에 나오는 얘기를 인용하면서 글을 끝맺었는데 이는 노무현 정부도 귀담아 들을 만한 메시지로 들린다. "사회의 계급과 신분지위의 구분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으나 부와 권력을 찬미하고 숭상하는 이 경향 혹은 가난하고 비천한 조건의 사람들을 천시하는 경향은 동시에 도덕적 감수성을 타락시키는 가장 보편적인 원인이다."

만

화

방



지구촌 '일권화' 가입원서...

나도 끼워주라 ...



좀비

